

1시간 만에 공무원연금 뽐내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정원석 지음

저항하는 교사들의 네트워크 **반독교사들**

※ 지은이 정원석은 전교조 경기지부 수원중등지회장이자 <벌떡교사들> 편집팀의 일원이다. 이 글은 그동안 필자가 <벌떡교사들>과 <노동자 연대>에 기고한 기사들과 전교조 지회들에서 발표한 연설문 등을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1시간 만에 공무원연금 뺏개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지은이 정원석
펴낸곳 저항하는 교사들의 네트워크 <벌떡교사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복동 11-1 부귀빌딩 6층
전 화 02-737-0528
ruteachers@hanmail.net

발행일 2014년 11월 13일

I.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살살이 파헤치기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직전에 공무원 노동자들을 분노케 한 정부 안보다 더 개악된 안이었다. 정부 안이 연금학회 안보다도 더 공격적이었는데, 새누리당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더 악독한 개악안을 내놴다.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발표 다음 날 바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 여당의 연금 개악안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더기로 만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세대의 연금 적자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래 세대의 연금을 없애 버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연금 개혁으로는 2016년 이후 누가 공무원이 되려고 할지 의문 [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은폐·줄속·허위·과장 논란이 휩싸여 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금 지급 의무 규정을 삭제해 놓고 이를 숨긴 채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금은 10퍼센트로 오르는데, 정부가 내는 부담금은 현행 수준(7퍼센트)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재정 절감 효과를 부풀렸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새누리당은 ‘실수’, ‘표기상 오류’라고 둘러대지만, 개악안이 형편없이 줄속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제부터 정부 여당의 개악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별로 살펴보자.

①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기여금 총액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올

라간다.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체율은 현행 62.7퍼센트에서 재직자(1년차 기준)는 41.25퍼센트로 떨어진다. 첫 연금액도 260만 원에서 171만 원으로 90만 원가량 깎인다. 20년간 받는 총연금액은 2억 원가량 줄어든다. 그 결과 연금소득수익비가 2.5에서 1.2로 떨어진다. 사실상 낸 돈에 조금 더 얹어 주는 적금이나 마찬가지다.

②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아라

신규 공무원은 수급 구조를 국민연금과 똑같이 맞췄다. 소득대체율이 33퍼센트로 급감해 1백38만 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보다 46퍼센트가 깎이는 것이다. 이른바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주장은 결국 공적연금의 하향 평준화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재직 공무원은 연금 대신 적금을, 신규 공무원은 연금 대신 용돈을 받게 생겼다.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 차이도 문제거니와 그 둘의 수급 구조가 분리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세대 간 연금 단절이 노동자들 간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재직년차별 연금수급액 변화〉

구분	현행	정부 안	연금 삭감률	기여금 인상률
1996년 임용 (20년차)	244만 원	231만 원	6%↓	18%↑
2006년 임용 (10년차)	221만 원	165만 원	26%↓	32%↑
2015년 임용 (1년차)	198만 원	133만 원	34%↓	41%↑
2016년 임용 (신규)	194만 원	105만 원	46%↓	34%↓

* 10월 17일 정부 안 발표 시 안행부 자료(공무원이 7급 1호봉으로 임용해서 30년간 재직하고 4급으로 퇴직했을 경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7급에 비해 교원의 보수나 연금이 10퍼센트 정도 많은 점을 비울적으로 고려한 것임. 단, 33년 이상 재직한다면 위 금액보다 10% 정도 더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

③ 더 오래 내라

기여금 납부 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려 한다(2016년도 기준 재직 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 더 오래, 더 많이 내라는 얘기다.

④ 더 늦게 받아라

모든 재직자에게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고 유족연금을 60퍼센트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16년 기준으로 26년 이하 재직자부터는 (33년 재직할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 18년 이하 재직자는 모두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계약 때 (201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비집고 들어가 계약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⑤ 퇴직수당 조금 올려 줄 테니 연금은 왕창 깎아라

정부 여당은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법 개정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한)을 민간 노동자들의 퇴직금 수준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 삭감 폭이 워낙 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노동자들의 손해가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퇴직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박근혜 정권은 다른 권리(노후 보장)를 침해하는 보상으로 주겠다고 한다.

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분할 지급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년 8월27일 발표)에 따라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민간 보험사에 맡기고 퇴직연금 투자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의 불안정성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다.

⑥ 연금액 인상을 물가인상률 이하로 묶어라

현재 연금액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하게 돼 있는데, 앞

으로는 부양률 증가를 반영해 물가인상을 이하로 묶겠다고 한다. 그리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연금 삭감 장치다.

⑦ 하후상박을 ‘위를 좀 더 삭감하고 아래를 좀 덜 삭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제도에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했다고 으스댄다. 새누리당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A값)과 공무원 전 재직 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 50퍼센트씩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마치 하위직 공무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전혀 진실이 아니다. 모름지기 ‘하후상박’은 하위직의 노후보장을 두텁게 보장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안은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하되 위를 좀 더 삭감하고 아래를 좀 덜 삭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개악안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이 받게 될 연금은 1백만 원이 안 된다. 현재 A값(438만 원)과 직종별 수급 통계를 감안할 때 법관·검사나 정무직 등 일부 고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와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연금도 추가적으로 깎이게 된다. 국가 지원 확대 없는 공무원연금 내 소득 재분배가 지닌 한계다. 소수의 고위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

분의 가입자가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그 결과는 공무원연금의 하향 평준화다. 진정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계급 내 재분배가 아니라 계급 간 재분배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을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을 달래고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의 분열도 피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진정한 하후상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당면한 정부의 연금 삭감 공격에 맞서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⑧ 퇴직 공무원들도 연금 일부를 뺏아내라

정부 여당은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에도 칼질을 하겠다고 한다. 재정 안정화 기금 명목으로 퇴직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2퍼센트에서부터 최대 4퍼센트까지 연금에서 떼 가겠다는 것이다. 하위 소득자 33퍼센트는 2퍼센트를, 중간 33~66퍼센트는 3%를, 상위 67퍼센트 이상은 4퍼센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 공무원연금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 수령액은 219만 원, 교원직은 280만 원인데 교사 대부분은 4퍼센

트를 빼앗길 판이다.

⑨ 고위 공무원의 연금뿐 아니라 기여금도 낮추는 소득상한제

새누리당은 고액 연금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상한제를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 되면 소득상한선은 현행 805만 원에서 670만 원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고위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뿐 아니라 기여금도 낮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월급이 1천만 원인 공무원은 매달 43만 원씩 기여금을 면제받게 된다. 정부가 지상 과제로 삼는 ‘재정안정화’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후상박 이치에도 닿지 않는다.

⑩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2000년 연금 개악 저지 투쟁 당시 쟁취한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압습하게도 ‘국가 지급 보장’이라는 단서 조항을 몰래 삭제했으면서 정작 법안 설명 때는 이 점을 말하지 않았다.

II. 지배자들의 연금 개혁 논리 요약과 반박

① 재정적자

정부와 기업주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악선전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다. 대표적인 논리가 재정적자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막고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자투성이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며 재정적자의 책임을 공무원에 떠넘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평균 9만 7천 원(4.5퍼센트)을 내는데 반해 공무원은 26만 1천 원을 낸다(7퍼센트). 교사가 내는 돈은 30만 원이 훨씬 넘는다. 공무원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독일과 대만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7퍼센트), 일본(7.7퍼센

트), 프랑스(7.83퍼센트)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

정작 적게 부담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다. 민간 사용자가 총 15퍼센트(국민연금 4.5퍼센트, 퇴직금 8.3퍼센트, 고용 보험료 1.3퍼센트, 산재보험료 1.62퍼센트)를 부담하는 데 반해, 정부는 고작 9퍼센트(연금보험료 7퍼센트와 퇴직수당 2.6퍼센트)만 부담한다. 미국(35.1퍼센트), 일본(27.7퍼센트), 독일(56.7퍼센트), 프랑스(62.1퍼센트) 등 외국 정부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쥐꼬리만큼만 부담하고 있다.

그럼, 공무원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가? 그렇지 않다. 총퇴직소득 수익비(연금총액+퇴직금/기여금납부총액)를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다소 떨어진다. 공무원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78로 국민연금 3.27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다. 이는 기여금이 1.6배 이상 많고 퇴직금이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금에 대한 총연금소득과 퇴직금을 외국과 비교해 봐도, 한국이 45.8퍼센트 정도다. 미국은 51~76퍼센트, 일본은 47.4퍼센트, 독일은 53.8퍼센트, 영국은 50퍼센트(+기초연금10퍼센트), 프랑스는 56.8퍼센트다.

공무원연금이 바닥난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IMF 직후 정부는 공무원 15만 명을 해고했다. 연금수급자가 엄청나게 는

반면, 기여금을 부담할 공무원은 대폭 준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부분을 연기금으로 부담 사용하거나 연기금 재정에 편성해야 할 예산 중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을 합하면 18조 원(현재 가치 32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재정적자의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 몫을 해야 한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1퍼센트), 미국 (2.1퍼센트), 독일(1.9퍼센트), 프랑스(3.4퍼센트)에 비해 한국은 0.6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1.5퍼센트다.)

②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국민 거지 만드는 신의 연금”이라며 개악의 군불을 지핀다.

물론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노후가 보

장되는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언론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불신받는 연금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름아닌 정부였다.(교사·공무원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지난 번 국민연금 개악 때 함께 싸우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제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재직 중 박봉을 견뎌야 하고 겸직이나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퇴직 후 취업에도 제한이 따른다.(2013 민간임금 접근율을 보면 공무원 노동자의 보수는 1백인 이상 작업장의 83.7 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리고 퇴직금이 따로 없고 퇴직수당은 민간 노동자의 1/3 수준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재직 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미래에 보전 받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다.

③ 고령화 논리

지배자들에게는 노동자들이 오래 사는 것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양률(연금수급자/연금기여자, 현재 33.8퍼센트)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 기간은 9.6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부양률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미국 88.1퍼센트, 일본 65.7퍼센트, 영국 103.1퍼센트, 독일 58.6퍼센트, 프랑스, 128.3퍼센트) 연금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80년이 돼야 90퍼센트에 도달한다.

김무성은 “미래 세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마치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것인 양 치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미래의 노동자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국가가 버린 부모의 노후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자신의 노후 또한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연금 축소로 이득을 보는 것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와 기업주이다.

Ⅲ. 교사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에 답하기

Q 박근혜 정권은 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해 공적연금 전체를 축소하려고 한다. 지난 20년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번갈아 가며 개악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작년 7월에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납입액을 현행 9퍼센트에서 14퍼센트(현행 공무원연금 수준)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개악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개악을 저지해야 공적연금의 개악 도미노를 막을 수 있다.

한편, 공적연금의 약화는 사적연금의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자들의 노후를 볼모로 민간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연금 민영화’이기도 하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공적연금이 부실해 노후보장이 되지 않으니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는 스크루지 같은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에는 산타클로스 같다.

Q 공무원연금 때문에 나라 살림이 거덜 난다는데 사실인가?

보수 정치인들과 기업주 언론들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고 공포심을 조성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3백55조 원이고, GDP가 1천2백조 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 2조 5천억 원 때문에 나라 살림이 거덜 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OECD의 공무원연금 지출은 GDP 대비 1.5퍼센트인데 반해, 우리 나라 공무원연금 지출은 0.6퍼센트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추산에 따르더라도 정부 보전금은 2060년에 22조 원, 2080년에 34조 원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기 위해 ‘누적 적자’를 들먹이며 적자 규모를 크게 보이게 하려 한다.

Q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연금 지출을 기금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후보장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GDP 대비 공적연금과 공공 부문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재정 적자라며 모두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용돈’조차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공적 연금의 재원을 기금에만 한정하는 것은 낸 만큼만 받아 가라는 사적연금의 논리와도 같다. 노동자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원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 부채를 이유로 공기업을 팔아치우고 재정 적자를 빌미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모두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자본가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재정 조달 방법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다. 이명박 정권이 기업주들에게 깎아 준 법인세만 원상 복구해도 해마다 수십조

원이 추가로 걷힌다. 기업들에게 깎아주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액만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자 감세
로 구멍 난 세수를 노동자·서민 증세와 공공지출 삭감으로 해
결하려 한다. 노동자 증세와 복지 후퇴에 맞서 부자 증세와 복
지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Q 고령화로 부양률이 급증한다는데, 지속 가능한 공
무원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는가?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자가 107만 명, 연금 수급
자가 36만 명으로 부양률이 33.8퍼센트다. 연금 개악론자들은
1990년에 비해 부양률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평균수명 연장이나 고령화와 함께 다른 사
회적 요인도 섞여 있다. IMF 금융 공황 직후 공무원 14만 명이
구조조정됐다. 이들이 연금 수급자가 됐고 퇴직자들의 연금선
택비율이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부양률의 증가
추세는 완만해진다.

한편, 서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 부양률은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58.6퍼센트, 일본은 65.7퍼센트, 미국은 88.1
퍼센트, 영국은 103.1퍼센트, 프랑스는 128.3퍼센트다. 연금학
회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2080년이 돼
야 90퍼센트에 도달한다.

그리고 부양을 부담은 OECD 중 꼴찌인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을 정상화하면, 즉 공무원 수를 두 배로 늘리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퍼센트 정도로 OECD 꼴찌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3.5퍼센트, 독일은 5.5퍼센트, 미국은 7퍼센트, 프랑스 7.8퍼센트, 영국 7.9퍼센트다.

게다가 현재 비정규직 공무원이 40만 명에 달하고, 법정 교원 정원 확보율은 (중등 교사 기준으로) 78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화하고 정규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은 교사·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 (일명 빗 폭탄)을 준다는데?

개약론자들은 '연금 지출이 많으면 다음 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

사실, 지금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젊은 세대가 나중에 받을 연금도 삭감된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난센스다.

그리고 공적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인들의 평균 사적이전소득(자녀나 친인척

으로부터 받는 돈)이 40만 원에 달한다. 공적연금이 부실한 탓이다. 국가가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을 그 자녀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그 비용을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적연금 개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기업주와 정부뿐이다. 따라서 연금은 세대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다.

Q 정부는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완전히 다른 연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2009년 개악 때 신규 임용자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2010년 이후 신규 공무원에게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과 유족연금 인하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지도자들이 이에 합의한 것은 큰 실수였다.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 재직 공무원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유족연금을 2010년 이후 임용자 수준으로 개악하겠다고 한다.

또, 정부는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한다. 아예 제도적으로 분리될 위험도 있다.

이번에는 절대 청년 노동자들의 희생을 저당 잡아서 안 될

것이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삭감을 막는 대가로 신규 공무원이 연금 절벽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

Q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 식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후상박’은 분배의 정의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두텁게 연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이런 정의로운 ‘하후상박’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맥락에서 ‘하후상박’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삭감하고 덜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을 덜 삭감하는(또는 삭감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하후상박’ 칼날이 고위 공무원의 연금만 노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겠지만, 진정한 하후상박을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당면한 정부의 삭감 공격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내 상대적 고연금이 문제다’, ‘고위직을 더 깎고 하위직을 덜 깎는 하후상박이 대안이다’는 일각의 주장은 우려풍스럽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연금을 방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공무원연금 개악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듯이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을 때 좋은 교육도 가능하다. 경력 있는 교사들이 대거 교직을 떠나고 유능한 신규 교사들이 학교로 들어오길 꺼린다면 그 고통은 교사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최근 ‘교원 명퇴 러시’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잘 막아낸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공격 — 시간제 교사제, 교원평가-성과급 일원화 등 — 을 저지하는 투쟁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는 학교의 황폐화가 될 것이다.

Q 전교조 교사들이 돈 문제로 투쟁하는 게 꺼림칙하지 않나?

사실 전교조는 임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자칫 이기적인 투쟁으로 비쳐질까 봐 우려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돈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와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교육과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요금을 올리려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내뱉을 강요하는 것이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위기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삭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결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아이들에게서 밥상을, 교사와 공무원에게서는 노후를 빼앗으려 하고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연금 개약으로 재정 지출 2조 원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물꼬를 튼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무원연금 삭감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복지와 임금을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약 반대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고통전가에 맞서는 중요한 투쟁이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임금은 곧 생존과 생활의 문제다. 연금은 노후의 삶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활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여금이 인상되는 만큼 월급이 깎이고 노후가 불안해지면 저축을 늘리게 되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연금 삭감 계획에 맞서 싸워야 한다.

Q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들 고통 분담하는데 공무원만 연금을 지키겠다고 투쟁하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의 맹목적 이윤 경쟁이 낳은 끔찍한 결과일 뿐 노동자들 탓이 아니다. 따라서 그 책임도 국가와 기업주들이 져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기 위해 서민 증세, 부자 감세, 복지 후퇴, 지방(교육)재정 감축,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공격을 펴붓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도 마찬가지다. 저들은 고통분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떠넘기는 ‘고통전가’다.

문제는 공무원 노동자가 고통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동자들이 고통을 덜거나 처지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연금 개악은 정부의 재정 적자 논리에 힘을 실어줘서 다른 공적연금 개악의 빌미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전가’를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개선’ 등 공적연금을 상향평준화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싸워야 한다.

Q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고통분담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의 빌미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정부와 기업주가 될 것이다.

형평성이 문제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처럼, 공무원연금을 삭감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 개선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을 강화·개선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노후보장이 가능한) 유일한 기반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야 할 지표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Q 연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금 인상을 받아내는 것은 어떤가?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후불 임금’이다. 그런데 종종 이 주장이 엉뚱한 결론으로 이를 때도 있다. 가령, 민간 수준으로 보수와 퇴직금을 올리고 그만큼 연금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장은 실용적인 대안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고 공적연금 전체를 축소시키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민간 노동자들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연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 또, 공무원연금 개악이 국민연금 개악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와 퇴직금 인상을 연금 삭감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 협소한 부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한 양보와 타협은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될 것이다.

Q 연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자는 안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급받는 연금액의 최고액과 최저액 한도를 설정하는 상·하한제가 새삼 정부 안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김진수 교수가 내논 이 안은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긍정적이라고 <한겨레>에 소개됐다. 새정치연합도 연금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안은 정부 안보다 삭감액이 더 많다. 신규 공무원에게 별도 연금 체계를 적용해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금은 더 많이 깎는 안이다.

고위 공무원 연금을 더 깎고, 연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뒀어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적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한다. 그런

데 문제는 하한선(150만 원)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의 연금도 모두 15퍼센트 깎을 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직급과 관계없이 15퍼센트 깎자고 한다. 새누리당 안이 2~4퍼센트 깎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이 깎는 안이다.

게다가 수급 개시 연령 연장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Q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정부의 절차와 방식 또는 강도와 속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수준이다.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에 반대하며 “당사자와 협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연금 상·하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사이에서, 청와대 실세를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등 정권이 약점을 보일 때 새정치연합은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야합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 정확히 그랬다. 아마 공무원연

금 개악 쟁점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이 다름아닌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었다.

이런 새정치연합의 기회주의는 그 당의 자본가적 성격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의 기회주의를 가차없이 비판하면서 아래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Q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가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처럼 광범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도 처음부터 광범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언론의 ‘철밥통’, ‘귀족노조’라는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연대 구축 그리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지지와 연대를 끌어낸 것이다. 연금 개악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투쟁을 통해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국민연금 개선, 기초연금 확대)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걸고 투쟁해 나간다면 지지와 연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투쟁하면 연금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까?

새로운 경제 위기가 엄습해 오고 있고 박근혜 정권의 강성 우익적 성격을 봤을 때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그렇다고 투쟁의 결과가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운동이 충분히 고양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권도 몇 가지 요인들이 결합돼 타격을 입고 있다. 경제 위기, 부패,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고조,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정치적 운동과 노동자 운동이 박근혜 정권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막가파’이긴 하지만 막강하지는 않다.

지난 11월 1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사 총궐기에는 12만 명이 모여 정부의 공무원연금 공격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보여 줬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교원 집회”로 기록됐다.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공격에 맞선 저항을 잘 조직한 전교조 지도부가 연금 개악 저지 집회 조직에 상대적으로 덜 열의를 보인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집회 참가 노동자들이 지적했듯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려면 집회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참가하겠다는 노동자들이 60퍼센트나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7월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시” 전 지부 총회를 개최해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논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개약 추진이 확실시되고 12만 명이나 모여 투지를 보여 준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향후 투쟁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

그럼에도 11월 1일 총궐기는 공무원연금 개약 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줬다. 거대한 규모의 대열을 보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서로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었다. 총궐기를 좋은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정부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

Q

사회적 합의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11월 1일 총궐기 대회 결의문은 “복지국가를 위한 범국민 대책기구 구성 및 ‘복지국가 아젠다’ 마련”과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합의체’ 구성 촉구” 등을 향후 방침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금 개약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들과 논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투쟁의 결과물일 때 우리 편에 유리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처럼 불통이 특기인 상대일 때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 협의체’에 들어올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단호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때다.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함께 토론하고 투쟁합시다

〈별떡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분노할 뿐 아니라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 소책자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 소책자를 소개해 주고 함께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하고 투쟁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조합원들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별떡교사들〉

전화: 02-737-0528

이메일: ruteachers@hanmail.net

지은이 정원석: 010-2070-9793

〈별떡교사들〉 편집인 김현옥: 010-3240-0879

〈벌떡교사들〉을 소개합니다



〈벌떡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 네트워크를 건설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4면짜리 월간 신문입니다.

매달 20일에 발행됩니다.

〈벌떡교사들〉의 호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1부 연간 정기구독료는 11,000원입니다(우편료 5,000원 포함).

5부 이상 정기구독 시 우편료는 무료입니다.

- ▶ 구독자는 정기구독자가 돼 주세요.
- ▶ 혼자 보기 아까우시죠? 주위 동료 교사들에게도 서너 부 배포해 주세요.
- ▶ 공유하고 싶은 투쟁 경험, 투쟁 전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죠?
그러면 기고해 주세요.

ruteachers@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글 마감은 매달 12일입니다.

- ▶ 얼마라도 괜찮아요, 후원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및 후원금 입금 계좌] 농협 356-0965-6124-13 (예금주 김현옥)